

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

- 김민석 국무총리,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 주제

- ▶ 예방-대응-복구 전 단계 혁신, ‘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’ 발표
- ▶ 추석 연휴 및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행사(축제·공연 등) 안전관리 대책 점검

□ 정부는 10월 2일(목) 14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「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」를 개최했다.

* ‘중앙안전관리위원회’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, 중앙-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‘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’와 통합하여 함께 운영

□ 이번 회의는 여름철이 끝나는 시점,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포함하여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논의·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-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비·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‘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’의 추진방향을 확정·발표하고,
-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‘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’을 논의하였다.

□ 김민석 총리는 ‘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’을 보고받기에 앞서 “올여름은 전세계적 현상인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여름”이라고 언급하며,

- “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기후변동을 상시적인 위협으로 인지하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비태세를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 시점”이라고 말하였다.
- 향후 “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정부의 자연재난 대비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이어, 김 총리는 ‘20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’을 보고 받고, “행안부와 관계부처는 하반기 행사에서 ‘사고 제로’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- 특히,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“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-지자체간 협력 체계, 현장상황실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”을 주문했다.

□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“관계부처는 산업재해, 교통사고,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한 재난 대비·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”고 말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

□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곳곳에서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상시적인 위협으로 자리잡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약 2달간 범정부 TF를 구성·운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.

- 종합대책은 ‘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자연재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’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(82개 중점과제)으로 구성된다.

① 물적 기반 확충과 기상·피해 예보 고도화로 대규모 피해 사전 예방

-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,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의 보강도 추진한다.
 - 기후부는 하천·하수도·댐의 설계기준을 시설물 위험도, 지역별 강우특성,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설계빈도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‘31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간다.
 - 국토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기준을 상향(지하차도 50→100년↑, 비탈면 20→30년↑)하고,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역환경과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‘한국형 항만 설계기준’을 마련한다.
- 각 관계부처는 자연재난 유형별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소관 시설물을 확충하고, 구조적 안전성도 강화해 나간다.
 - 기후부는 홍수에 대비하여 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(봉화댐·향사댐) 조성 등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확대하고, 빗물터널(2→4개) 및 하수관로·펌프장(210→270개소) 증설을 통해 도시 배수능력을 확장한다.
 - 기후부는 국가산단·가뭄지역 중심 상수도 확충, 국가 주도 물 재이용시설 설치,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물공급 인프라도 개선한다.

- 폭설에 대비하여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의 설하중 기준을, 농식품부는 원예·축사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한다.
-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상 및 피해 예보 시스템의 신속성과 정확도도 개선한다.
 -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수치예보 해상도를 개선(8km→3km)하며, AI 모델을 도입하여 예측기간도 확대(11→14일)한다.
 - 기후부는 수위관측소 확대(933→1,191개),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보지점을 확대(223→270개소)하며, 산림청은 산악 기상관측망 확충과 AI 기반 산사태 예측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.

②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통합대응체계 전환

-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·소방청·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극한호우를 넘어서는 ^{가칭}재난성호우 개념*을 도입하여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,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·대피 의무화, 선제적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초기대응도 체계화한다.
 - * (예) 시간당 강수량 100mm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
-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, 협력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.
 - 읍면동별 ‘재난상황 종합지도’ 작성, 읍면동장의 주민대피 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읍면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기초지자체의 상황실 자원(CCTV 관제시스템, 전담인력, 근무공간 등)도 확충해 나간다.
 - * ① 침수예상지역 ② 통제 필요도로 ③ 토석류 대피 지역 ④ 대피장소 등 표시
 - 대응기관 간 정보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방·경찰·해경의 긴급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, 지자체의 소방상황실에 대한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(^{기존}울산·강원·경북)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.
 - 주민대피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, 고령자,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에 1:1 대피도우미를 매칭하는 등 민-관 협력도 강화한다.
- 재난문자 개선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도 고도화한다.
 - 재난문자는 단계별 행동유도 메시지 체계(^{예시}대피준비→대피)를 구축하고 표준문안을 정비(대피장소 구체화 등)하여 실효성을 높인다.
 - 재난 위험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저감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명문화(「재해영향평가법」 제정)하고, 산지 인접(50m 이내) 개발 시 산림 재난 위험성 사전검토제도를 도입(「산림재난방지법」, '26.2.1 시행)한다.

- 소방청의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시스템 개발, 기후부의 하천변 위험을 인식하여 알리는 지능형 CCTV 도입 확대(1,000여개↑), 과기정통부의 AI 기반 드론·CCTV를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·경보 실증 등 재난 대응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확대한다.

③ 사후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

- 행안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적극 검토·확대하고,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.
 - 이재민 주거지원 개선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있는 임시 주거시설은 대체시설을 지정하고, 공급 형태도 모듈러 주택을 포함하여 다양화하며, 구호물자 구성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개선한다.
 -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비보험 품목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, 피해유형별(수준·양상) 맞춤형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.

2 '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

- 행안부는 '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, 공연, 공항 등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*을 보고했다.
 - * ①현황조사 →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→ ③사전점검 → ④ 모니터링·대응
- 행안부는 경찰·소방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절별로 지역축제, 공연과 같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인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.
 - 9월 12일(금)부터 11월 16일(일)까지 ‘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’으로 지정하고, 주요 축제*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, 특히 대규모 행사**에 대해서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.
 - * 규모(순간최대 1천 명 이상), 장소(산·수면), 폭발성 물질 사용(불꽃축제 등) 등 고려
 - ** 울산불꽃축제(10.19), 부산불꽃축제(11.15) 등 예상 순간최대 인파가 3만명 이상인 행사
 - 헬러윈 전후로 10월 24일(금)부터 11월 2일(일)까지 ‘헬러윈 특별대책 기간’을 운영하여 전국 주요 지역*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,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 - * 과거 사고 사례, 인파밀집 동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

- 특히 **다중운집**이 예상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한 **지자체장의 안전조치** 근거를 규정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안*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, **행안부**는 지자체 대상 **설명회**나 **합동 상황관리 시 컨설팅** 등을 통해 **지자체의 안전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**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.

* **지자체장의 소관 시설장소에 대한 다중운집 실태조사 의무** 부여 및 사고 발생 우려 시 **긴급안전점검, 행사중단·다중해산 권고 등 권한** 부여

- 행안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지난 현안관계장관 회의(9.24)에서 발표한 ‘**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**(10.3(금)~10.9(목))’을 추진 중으로, **공항, 전통시장,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**에 대해 **국토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**를 실시한다.

3 지자체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

- **서울시, 부산시, 경남도는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**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.

- 순간 최대 인파가 5,000명 이상으로 **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중점관리대상**으로 선정하여 인파관리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.
- 행사 개최 전 **안전관리계획**을 검토하고, **계획의 이행실태와 분야별(전기·가스·소방 등) 위험요소,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** 등에 대해 **합동점검반(지자체, 경찰, 소방, 민간전문가)**을 구성하여 **안전점검**을 실시한다.
- **CCTV 통합관제센터, 유관기관(지자체, 경찰, 소방 등) 합동 현장상황실 운영** 등을 통해 인파밀집 등 위험을 파악하고,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**확성기, 사이렌, 재난문자**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한다.

- **서울시는** 지난 주 개최된 **서울세계불꽃축제(9.27)**를 비롯하여 **13건의 행사***에 대해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
* **서울거리예술축제(10.6~8), 한강 빛섬축제(10.3~12), 허준축제(10.18~19)** 등

- 이외에도 **헬리원 특별대책기간** 동안에는 **인파밀집 예상 지역(이태원, 익선동, 홍대 광광특구 등)**에 대해 유관기관 **현장 합동상황실**을 설치하고 **CCTV 모니터링, 민-관(지자체, 경찰, 상인회 등) 합동 순찰** 등을 실시한다.

- **부산시는** 10월과 11월 중 **대규모 행사 8건***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며,

* **부산불꽃축제(11.15),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 추석 특별공연(10.4)** 등

- 특히 **지스타(11.13~11.16)**와 같은 기간 내 개최되는 **부산불꽃축제(11.15)**에 대해 **중점관리구역 42개소**를 지정하고 **안전요원 7,000여명**을 집중 배치하며, **관람존 입장을 철저히 관리**하여 **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내 수용인원(약 20만명) 도달시 입장을 전면 통제**하는 등 **인파관리를 강화**할 계획이다.

- 또한, **부산시는**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**구·군 및 민간이 주최하는 소규모 옥외행사 40건**에 대해 **표본점검**을 실시한 결과, **구·군 마다 관련 조례의 일관성**이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**조례 개정**을 권고했다. 이와 더불어 **행사 안전관리계획 ‘부산형 표준안’과 사전 체크리스트**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**개선대책**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.

- **경상남도는**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(10.9~12), 통영 어부장터축제(10.24~26) 등 **15개 축제·행사**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,

- 특히 작년에 **118만 명이** 관람한 **진주남강유등축제(10.4~19)**에 대해서는 **총 6,109명의 안전관리 인력**을 배치하고, **불꽃, 드론쇼 등 주요 행사**가 종료된 이후엔 **관람객의 안전한 귀가**를 위해 **일방통행구역**을 설정하고 **순차 퇴장**을 유도하는 등 **인파 안전대책**을 시행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, 자연재난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주민규 (044-200-2365)
		담당자	사무관 전경민 (044-200-2342)
담당 부서 <총괄>	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송상훈 (044-205-4110)
		담당자	서기관 김준기 (044-200-4111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	책임자	과 장 설재진 (044-202-635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혜경 (044-202-6352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 조수창 (044-205-52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승우 (044-205-5219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욱 (044-201-1791)
		담당자	사무관 임연화 (044-201-1728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	책임자	과 장 채태선 (044-201-6490)
		담당자	사무관 목병수 (044-201-6494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	책임자	기획관 이경진 (044-201-3311)
		담당자	사무관 황영용 (044-201-4570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 김인수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훈 (044-200-5853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	책임자	과 장 장은석 (02-3150-2064)
		담당자	경 정 이태훈 (02-3150-2961)
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소방청 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 진형민 (044-205-7560)
		담당자	소방경 안영준 (044-205-7562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산림청 산사태방지와	책임자	과 장 최현수 (042-481-4270)
		담당자	사무관 이민수 (042-481-4033)
담당 부서 <자연재난>	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조남산 (042-481-7290)
		담당자	사무관 한대석 (042-481-7275)
담당 부서 <다중운집인파>	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 양기현 (044-205-5250)
		담당자	사무관 허재훈 (044-205-5269)
담당 부서 <다중운집인파>	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	책임자	과 장 정형철 (02-2133-8515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경 (02-2133-8526)
담당 부서 <다중운집인파>	부산시 사회재난과	책임자	과 장 신성봉 (051-888-2950)
		담당자	주무관 박재문 (051-888-2982)
담당 부서 <다중운집인파>	경상남도 사회재난과	책임자	과 장 김창덕 (055-211-2850)
		담당자	사무관 백종열 (055-211-2862)



붙임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주요내용

구분		기존	개선
자연 대응 혁신	설계 기준전환	▶ 목표: 과거 기준에 맞춘 SOC 방재성능목표 설정 ▶ 전환: 일괄적 설계변도 (국가 100~200년, 지방 50~200년) ▶ 한도: 구체적인 설계 기준 부재로 최소 설계변도 적용	✓ 기존 패턴 변동 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상향 ✓ 일괄적 기준 석재, 위험도 고려한 선택적 설계변도 ✓ 방재성능목표 또는 과거 최소 최대량유량도 적용 ✓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토록 설계기준 강화
	노후 시설보강	▶ 전환: 국가하천 제방 11.6%(468개) 보강 필요 ▶ 한도: 노후 하수관로(20년이상) 44%(7,6만km) ▶ 분: 노후 댐(30년 이상) 56%(19개댐) ▶ 목표: 기존 시설만으로는 대응 곤란 집중호우 빈번	✓ 과거 피해발생 제방 중심 신속 보수·보강 착수(∼'27) ✓ 고품질 확관(1,350km) 우선 교체·보수(∼'30) ✓ 비산방류시설 설치, 연제 보강 등 안전성 강화(∼'31) ✓ 홍수조절 및 저류 위한 물그릇 확대 ✓ [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(분화댐·함사댐) 조성, ∼'31]
	인프라 확충	▶ 도·시·군: 상습침수구역 배수력 부족 ▶ 시설관리: 전입차터시설 설치에도 침수사고 발생,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한계, 연율 추락사고 지속 ▶ 도시관리: 도시 성장과 노후화로 극한기후에 인한 피해 증가, 도시공간 재해대응력 강화 제도 미비 ▶ 개발: 지역적 강수 편중 등 가뭄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, 연 중점 공급(91.5%) 등 안정적 물공급 한계	✓ 빗물터널 저기중공 및 추가 설치(2~4개) ✓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펌프강 산 증설(210~270개소) ✓ 지하차도 전입차터간 강화(15~5cm) ✓ 연율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및 빗물받이 유지관리 전문기관 활용 권고 ✓ 극한 기후 가뭄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도시계획 반영 ✓ 기후위험도 분석 및 기후위험지도 구축
	AI 활용	▶ 기대효과: 방대한 계산 기반으로 신속 제갈한 예측 곤란 ▶ 문제해결: 인력기반 모형으로 수위 예측 30분 소요 ▶ 신기술: 원지 중심 산출, 과거 경험 기반 예측 ▶ AI기술: 공급자 중심 데이터 제공 ▶ 데이터: 고밀도우도 활용강우와 동일하게 대비	✓ 상수도 확충,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공급 인프라 확충 ✓ 국가 주도 댐 대체수자원 연계 공급, 댐순환 시설 설치 ✓ 데이터 수집 확대 및 수치모델 고도화(해상도 8~3km) ✓ 독자 AI 개발 등 기상예보 고도화 ✓ AI 기반 예보(30~10분 단축) 및 수위관측소 확대(933~1,191) ✓ 시뮬레이션 통한 달 최적 방류 결정 지원 ✓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및 산사태 AI 예측 고도화 ✓ 수요지 중심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물류망 고도화 ✓ 개·재난성호우 개·재난성(0: 1시간 100mm 이상 예상 등) ✓ 개·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생성(산재취 주민대피 유도) ✓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 대피 의무화
자연 대응 강화	국가 통합 대응 체계 전환	▶ 재난성 호우·내물 체계수립 ▶ 대피계획: 수위 임계치 도달 시 대피, 대피시간 부족 ▶ 대피계획: 사전 조준, 기관별 재난 대응	✓ 물면통발 재난대응 역량 강화(재난상황 종합지도 작성, 소방·경찰 등 관계기관 공동활동, 읍면동장 수련대피 병행 권한 부여) ✓ 기관간 정보전달체계 표준화 및 초기 대응 체계화 ✓ 사전 위험도로 지점 등 신속한 통제·유형 조치 제거화 ✓ 소방·경찰·해경 긴급신고 정보 실시간 실시간 공유 ✓ 지자체의 소방상황실 협력관 파견 제도 전국 확대 ✓ 마을주민을 활용한 주민대피지하단 운영근거 마련 ✓ 우선대피 대상자(고령자, 장애인 등) 1:1 대피도우미 배정 ✓ 민간 플랫폼 활용 제보 통로 마련 및 인센티브 부여 ✓ 재난안전권 우선가치 명문화 및 상황실 전달관 확보 ✓ 단계별 방류유도 메시지(대피준비+즉시대피), 중책 최소화 ✓ 재해예방방범기법 제정('25), 산악재난 위험성 정도 지도화 ✓ 국민안전안전관리도 통한 자금지원 및 전문 개척 지원 ✓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및 출동대 자동명령 ✓ 위험 자동 인식 지능형 CCTV 도입 확대(1,000개 이상) ✓ 자연 사물재난 위험을 사전 탐지, 최적 대응 기술 개발 ✓ 개선복구 확대(전체 복구사업 전 수의 약 0.5 ~ 1% 수준 확대) ✓ 모놀리 주력 등 임시주거시설 공급 다양화 ✓ 고소우 물품(생활용품 키트 등) 중심 구조물지 제공 확대 ✓ 비보호 동북 복구단기 건설화 및 지원동북 다양화 ✓ 피해 보상금·농수기입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✓ 간접피해 등 각종 사고 피해자 지원방안 검토 ✓ 피해 수습 유형별 맞춤형 재난지원금 신청기준 구체화 ✓ 복지제도 연계(조가·신속 복귀 + 중장기·분야별 복지제도) 통한 회복 지원 ✓ 임시주거시설 제외지 범위 확대 조정 및 점검 강화
	인간 협력 확대	▶ 예방부담: 기관 중심 정보 활용 및 대응체계 ▶ 인·재: 주민대피 지원 근거 마련 ▶ 사회적: 시민 제보와 관제시스템 연계 미흡 ▶ 사회적: 재난안전업무 후순위 경향, 인력 정비 부족	
	재난관리 기반 고도화	▶ 예방부담: 재난문자 정보제공 부족 및 중복 발송 ▶ 사회적: 재해 예방 및 위험성 사전 검토 미흡 ▶ 사회적: 재난안전사업 기술 제품 확산 저조 ▶ 사회적: 신고·복구 신고·신고 접수 및 대응 지연 ▶ 사회적: 인력에 의존한 국가하천 CCTV 위주 감시 ▶ 사회적: 민간인 선제적 기술 개발 곤란 ▶ 사회적: 단순 일상복구로 인·재적 피해 발생	
	AI 활용	▶ 대피계획: 수위 임계치 도달 시 대피, 대피시간 부족 ▶ 대피계획: 사전 조준, 기관별 재난 대응	
자연 복구 혁신	재피해 방지	▶ 복구지원: 방출적 침수자구 구조물지 제공	
	실질적 지원	▶ 복구지원: 복구단기 현상 관리, 피해액 부분 지원 ▶ 복구지원: 간접피해 및 맞춤형 지원 부재 ▶ 복구지원: 침수취약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존재	
	인간 협력 확대		
	재난관리 기반 고도화		

① 설계기준 전환 및 노후인프라 보강 등 물적기반 확충

② 재난성호우 개·재난성 및 민간협력 확대 등 국가통합대응체계전환

③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측 및 대응 고도화

사전 대비 + 신속 대응 + 국민 피해 최소화

향구적 개선복구 확대를 통해 반복피해 방지

주거시설 구조물품 확대 등 피해자 지원 및 보호